

한반도 평화, 과제와 전망

- 출처 :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 일시 : 2005년 11월 2일
- 연사 : 정동영 통일부 장관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남북 관계의 진전 현황

① 남북 교류 활성화

2005년에만 9만 명이 북한을 다녀오는 등 올해에 들어 남북 관계는 양적,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올 연말이 되면 남쪽 국민으로써 이북을 왕래한 분들이 대략 1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6·25전쟁 이후부터 1997년 말, 1998년 국민의정부 출범 전까지 대략 2,900명, 2,95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정부 5년과 2004년까지 7년 동안 8만 5,000명이 이북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에만 9만 명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50년보다 올 한해 다녀온 분이 더 많으니까 양적인 접촉의 측면에서 뭔가 물꼬가 트였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아리랑 공연이나 만수대 등에 참관, 참배하는 것이 남쪽 내부를 뿌리 채 흔들어 놓았을 법도 했습니다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주일이나 지나자 포말처럼 지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8·15를 계기로 해서 그날 밤에 북한 상선이 제주로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서해 상에 해군사령부끼리 전화가 연결되었으며 DMZ가 조용해 졌습니다. 선전수단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선전하던 일체행위가 중지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쪽 대표단이 우리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올해 9만여 명에 달하는 방북 인원과 맞물려서, 지금 시점에서 질적 변화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양적 변화,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월 28일 개성에서 남쪽 공무원과 북쪽 공무원이 약 20~30명, 우리는 16명이 가서 근무합니다. 2층에는 남쪽 통일부, 재경부, 산자부 등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3층에서는 북측에서 내려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 작지만 사실상 통일합동 정부청사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상징적 변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② 대북 경협 사업의 의의

남북 실무진 교류, 개성공단 가동, 북측 철도·도로 개발 지원 등 경제 협력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음

국민의정부 5년, 그리고 핵 문제로 막혀있었던 참여정부 2년 동안은 3대 경협 사업을 축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현상유지 또는 병행 발전을 기해왔습니다. 금강산 문제로 해서 많이 걱정을 국민들에게 끼쳐 드렸습시다만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개성은 작년 이맘때 개성에 직접 투자하신 사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작년 11월경만 하더라도 아직 삼질하기 전인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설계도 작성하는 수준이었죠. 그 전까지 이북에서는 늘 '왜 와서 사진만 찍고 삼질을 안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15개 공장이 완공 단계에 있거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보면 개성 시내에 불빛이 없는데 이쪽 공단은 불야성을 이루는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대 사업 중에 철도·도로 사업은 6,00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도도 역사하고 신호체계 이런 마무리 작업을 남겨놓고 있고 노선은 연결이 되어 있어 연말까지는 어쨌든 물

리적으로 남북 철도가 연결됩니다. 원래는 10월에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북한의 열차가 개성역에서 새로 부설된 구간으로 물자를 싣고 운행하는 모습이 관측되어 북측이 새로 깔아놓은 궤도에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사이에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를 개성까지 시범 운행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위해 북한 군대가
12km 후방으로 배
치되는 부수적 효
과가 발생했음

장관급 회담에 나온 북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 공업지구를 놓고 말하면 북한 군대가 12km나 뒤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책으로 맞서있는 분계선을 풀어준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남측의 70만 명, 북측의 110만 명 등 남북의 180만 젊은이들이 남쪽에서는 24개월, 북쪽은 8년의 군복무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 사업을 위해서 군대를 후방으로 12km 뒤로 이동시킨 것을 비용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③ 회담 문화의 변화

지난 6월 특사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남북한의 문화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벌써 장관급회의를 열 몇 차례나 했는데 처음에는 실질적인 진전도 있었고 그 자체가 하나에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논쟁적이고 소모적인 모습을 보이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한 5분을 날씨 얘기, 농사 얘기 하다가 서로 평행선을 긋는 주장만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회담을 해서 뭐하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어쨌든 남북간의 회담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언론에서 원탁을 도입한 형식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측면만이 아니라 협의와 실천의 장으로써 회담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측에서 북측의 노동신문 사설에서 몇 년 전에 내 걸었던 실력, 실리, 실

적 3실 주의를 남북한 접촉 회담에서도 적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북측도 수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양회담 때는 체면주의를 타파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면주의가 사전에 나오는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북측 사전에도 없더라고요. 앞에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는 수식하는 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기들은 체면주의라는 말을 절대 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체면주의라는 말은 지난 6·17 면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문화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제 중심으로 바뀐 것도 하나의 진전이라고 봅니다.

④ 대북 지원사업 현황

남북간 화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다음 공동체를 위한 기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대북 지원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모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부정적인 비판적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난 7년 동안 매년 식량 40~50만 톤, 비료를 30여만 톤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식량난 해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2004년에 북이 도입한 식량이 모두 76만 톤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50만 톤을 공급했으니까 절대적인 양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북이 도입한 비료 236만 톤 가운데 남쪽에서 지원한 것이 140만 톤이니까 이것도 60% 가까이 됩니다. 올해 쌀 50만 톤이 주민 1인당 21kg씩 지원이 되어 1인당 쌀 소비량 82kg를 기준으로 할 때 27%를 우리 남쪽에서 지원했습니다.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자유롭게 남북이 내왕하면서 실질적으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다음 공동체로 가는데 있어서 확실한 기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2005년과 2006년에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 6자 회담의 의의와 과제

① 9·19 공동성명의 의의

베이징 공동 성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9 공동성명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점 제기를 언론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들어 나지 않은 듯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지 않고 국민통합을 하지 못하고 문벌, 파벌, 계파로 나라를 이끌어 가면 그 결과가 국가적, 사회적 침체로 나타나난다는 것을 19세기 이후 100년의 역사가 웅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들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쓰라-테프트 밀약도 밀약이지만, 그 사실 자체를 조선 백성 2,000만 명 가운데 단 알아챈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었습니까? 1943년의 카이로, 알타, 포스담 회담, 1945년 해방과 분단, 1951년 6·25전쟁, 가깝게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 모든 사건들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히 배제·소외되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 눈을 부릅뜨고 있는 4,800만 국민의 역사의식과 국제의식은 바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회담은 우리 국제 외교사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남북간 의사 소통을 담은 최초의 사건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과연 4강이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함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남북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적대하고 대결하는 한 남도 북도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 앞에 맥을 쓸 길이 없습니다. 남북의 소통을 전제로 9·19 공동성명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베이징 회담은 우리 국제 외교사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남북간의 의사 소통을 담은 최초의 사건,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남북 관계사를 보면 남북이 풀려 나갈 때는 한미간에 갈등을 빚고 한미공조가 원활하

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번 베이징 공동 성명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한미공조와 남북협약, 이 두 바퀴가 동시에 굴렀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 핵폐기와 비핵화, 관계 정상화, 그리고 냉전 해체라는 근본적인 틀을 담고 있음

9·19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현존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국내도 그렇고 미국의 강경 보수 흐름 속에서는 북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위에서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변국의 힘에 의해서 한반도 명운과 한반도 문제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저는 송민순 대표가 적절한 비유를 했다고 봅니다. 북미간 제네바 합의는 돌이 방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번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을 회관에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하고 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일방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 일견 허술해 보이지만 강한 합의라는 것이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네바 합의는 경수로 문제의 봉합이었다면 9·19 공동성명은 핵폐기와 비핵화, 관계 정상화, 그리고 냉전 해체라는 근본적인 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9·19 공동성명은 최선의 합의의 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숙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행시키고 실천으로 옮기느냐 인데, 이것은 중국이 해주거나 미국이 해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에 서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송전 계획에 대해서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분석

들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중대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6자 회담 재개 및 타결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진 이후 3년 동안 북핵 문제는 두 가지 암초에 걸려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 존재 여부를 시인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또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네바 합의를 잘못된 합의, 실패한 합의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운명에 부딪힌 신포 경수로 문제였습니다. 이 양대 암초를 돌파할 힘은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존재를 시인하라는 미국과 없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북측 중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또 신포 경수로를 놓고 6자 회담이 재개되었던들 어떻게 9·19 공동성명으로 갔었겠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략 인프라를 우리 단독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6자 회담 전인

그 점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국민 다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불할 용의가 있고, 적어도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공동체라는 미래 비전 속에서 전략 인프라를 우리 단독으로 남쪽 국민, 정부의 힘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할 수 있었고 6자 회담을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끊임없이 장애를 조성했습니다. '당신들은 빈손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무엇을 기여하는 가'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대가와 부담을 감수하고 6자 회담에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가' 이런 식의 토론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6자 회담 합의문 타결 직전에 미래 경수로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일단 그 상태에서 보따리를 묶고 다시 회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던 마지막 국면에서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국운이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한다는 절충에서 합의의 형태로 묶어 낼 수 있었다는 것, 만일 그렇게 묶어내지 못하고 터져 버렸을 때 향후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2005년을 냉전의 외로운 섬으로 낙오되어 있는 우리의 처지를 전환시키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특히 11월에 APEC 회담을 냉전 해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도움을 청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월이었고 APEC 회담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시간은 있었다고 봅시다만 선언적 의미였고, 또 국회에 가서는 냉소도 당하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9·19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APEC의 21개 나라 정상, 특히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개별 정상회담, 정상간의 합동 대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북핵 문제 해결의 3원칙

참여정부는 경색되어 있던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핵 불용, 전쟁 반대와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3원칙을 선정했음

참여정부는 불운하게 출발했습니다. 2002년 10월은 대선 복판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 여부의 문제에 의해서 북미간의 갈등과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별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붕괴를 해체하면서 다시 원자로를 가동하고 2003년 1월 11일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를 다시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발표했으며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2003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양대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좌초시키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법에 관련해서는 이른바 3원칙, 즉 북핵

불용, 전쟁 반대와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3원칙을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든 핵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을 상대로 어떤 경우에도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던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하늘이 두 쪽이나도 전쟁은 안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은, 지난 2, 3년 동안 끊임 없이 회의와 냉소의 대상이었습디만, 어쨌든 9·19 공동성명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만 이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좋은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서 공동성명체 사항에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협력에 방도를 찾는 논의, 동북아시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에 관한 공동노력,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당사국간에 논의에 틀을 가동하는 문제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00년 전 실패했고 다시 21세기 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입니다. 동북아에서의 안보 협력, 이것은 역사상 한번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와 안정에 관한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공동 노력과 이것을 바탕으로 냉전구조를 뜯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1991년 12월의 기본 합의서 주역의 하나였던 연형묵 총리가 지난주에 타계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1년 기본합의서는 지금 읽고 또 읽어봐도 너무나 잘된 합의서입니다.

③ 역사적 반성과 향후 과제

남북 불가침과 화해협력,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덧붙여서 1991년 9월의 불가침과 화해협력, 교류협력의 부속합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수준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
요함

의서 수준에 도달하려면 더 가야합니다. 구체적인 물증은 없습
니다만 이 기본합의서를 대선 정치의 도구로 써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과거사 규명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1991년 12월의 민족평화
장전, 민족 화해협력의 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합의서를
1992년 10월에 일련의 공안사건과 관련해서 휴지조각으로 만들
었는가? 그때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는 어떠했는가? 또 국내 대선
정치에서의 내밀한 거래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1992년 12월 대
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고, 그 정부는 1993년 2월 취임사
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6개월 뒤에 다시 핵 개발의지로 무장한
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합니다.

미래 남북 관계의
대전제는 국민 통
합임

1990년대 전반 5년 동안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습
니다. 그런 역사적 반성 속에서 앞으로 5년, 10년, 우리 남북 관
계사를 어떻게 써 나갈 것인가, 국제 열강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화구조를 정착하고 냉전의 틀을 해체해 나가야 할 것
인가 하는 물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해주
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고민 속에서 끌어 갈 수밖
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제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서 있는 지점,
좌표를 읽어내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인식, 정서, 그리고
방향에 대한 공유, 이 두 가지만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장
벽을 뚫고 갈 뻔족한 창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동북아 미래포럼이 이런 질문에 대해
서 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
니다.

토론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먼저 장관님으로써만 답을 할 수 있는 비학술적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 장관님 후임으로 또 정치인이 좋은지, 아니면 전문관료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좋은지, 아니면 역대 많이 했던 것처럼 학자출신이 좋은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부가 큰 일을 해야 할 부처라는 점에서 장관님의 그 동안의 느낌은 어떠하셨는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협력공사가 만들어지면 부처간 역할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두 번째는 구체적인 우리의 남북 관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북협력공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저는 언뜻 협력공사가 만들어지면 통일부는 회담기능과 정책입안 기능만 빼고는 다 협력공사로 들어간다고 할 때 부처간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통일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저는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즉 새터민의 역할이 남북 관계의 걸림돌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통일의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 명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을 안 갖다가 만 명이 되면 마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하나원과 같은 새터민 정착 지원 역할을 통일부가 안고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망으로 조금 넘겨주시는 것은 어떤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남북 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학생들에게 앞으로 북한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느냐? 데이트하고 싶느냐? 했을 때 급격히 줄어들어서 200명에 두 명이 손들 정도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거리를 좁히

남북이 통합된 이후 독일처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는 것은 좋지만 남북한의 사회구성원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데 대해서는 통일부가, 우리 정부가 국민의정부 이후부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이나 통합이 된 이후에도 동서독처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남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러한 점에서 정책으로는 아직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저는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서약도 있지만 앞으로 남북한 교류가 됐을 때 내가 북한에 가서 근무하고 복무하겠다는 북측복무서약과 같은 것들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통일의 분위기를 높이는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흔히 1, 2년밖에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북핵 문제나 6자 회담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중장기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2011년이 주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일성이 1912년 생이기 때문에 2012년은 주체 만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2년은 지금 현행 제도로 하면 우리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2012년은 아마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북도 주체 100년을 놓고서 국가 전략을 이끌어간다고 볼 때 우리의 대북 정책도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미를 그대로 공감하면서도 9·19 공동성명은 약분이 되지 않는 최소공배수를 산출한 회의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 최소공배수의 형태인 9·19 공동성명이 약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국내 여러 가지 진보 보수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특히 약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셔서 약분이 되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
현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남북 관계
의 제도적 정립임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우선 제 생각에는 정부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 남북 관계의 정상화였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드는데 역사적 사명을 다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이나 이거죠. 저는 제도적 관계로의 정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은 이 제도적 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를 상호 의존적 관계로 끌고 가면서 궁극적으로 공동체 관계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공동체 자체는 현 정부에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동영 장관님의 그 동안의 행적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6월 초에 통일부 평가위원을 했습니다만 그 회의가 저한테는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6월 15일날 평양에서 민간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의 통일 총책임자가 그 민간행사에 참석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30명 정도의 평가위원들이 가지 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찬성한 사람이 저 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정 장관께서 제2의 6·15를 결단한 겁니다. 그 정도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보니까 하나의 결단이었던 같습니다. 결국은 그 후에 남북 관계를 돌파하는 돌파구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부터 제도적 관계로 끌고 가는 하나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남북 당국자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관계 중단은 남북 관계사에서 1990년 이후에 가장 긴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봄으로 만들고 그것을 끌고 나가서 결국

은 남북 경협을 기존에 상호 교역 관계로부터 상호 보완적 경쟁력을 끌고 나갔던 면에서 정 장관의 제2의 6·15 결단을 상당히 감명 깊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 본공단 분양 경쟁률이 5 : 1이라는 것은 시범공단 사업이 성공적이었던 것을 의미함

두 번째는 남북 관계가 어떠냐? B 플러스 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핵 문제하고 경협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핵 문제는 정상회담에 들어와 있고 두 번째는 3대 경협 사업인데 그것의 가장 대표사업이 개성공단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을 보게 되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공단 분양 경쟁률입니다. 지난번 시범공단이 실패했다면 본공단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본공단 분양 경쟁률은 지난번 시범공단의 운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봤을 때 5 : 1 정도 된 걸고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개성 시범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도 되겠지요. 이제부터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런 제도적 관계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의 보완적 역할 분담입니다. 사실은 당국자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북한 당국과 우리 민간기업의 문제가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시각이 다릅니다.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과 북한간의 교역관계를 보면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조조 관계가 있고 조일 관계가 있습니다. 조조 관계는 조총련과 북한 당국간의 관계이고, 조일 관계는 일본 기업과 북한과의 관계인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조조 관계는 감성적입니다. 비즈니스 차원보다 감성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조조 관계이고, 조일 관계는 철두철미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우리 민간기업과 북한과의 남북 경협의 성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까? 저는 조조 관계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감성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남북 관계를 돌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당국자 관계가 좋아졌다면 이제 민간 기업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조 관계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경제논리를 따라가는 조일 관계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남북 경협을 제도적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보완적 역할 분담이 중요함

그런 시점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제도화는 아직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시장경제에 대한 완벽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협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통일부가 당국자간 관계가 균형과 평형이 되게 현대 아산과 북한이 가야된다는 확실한 강박 관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강박 관념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당국자 관계가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민간 관계는 진짜로 경제 관계로 되돌려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쪽은 남쪽의 시장을 완전히 이해해야 하고 머리뿐만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적립이 안 되면 다른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현대 아산의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독점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독점에는 우리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법적인 독점이 있고요. 요즘 신문에 나는 건 법적 독점이고 중요한 것은 자연적 독점입니다. 먼저 인프라 깔고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발 주자가 시장에 진입할 때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북 사업은 현대의 자연적 독점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더라도 같은 단가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

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한 기업이 계약을 독점한다는 법적 독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자연적 독점 관계는 그대로 두는 것이 대북 협상에 있어서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독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의 특정한 보완적 역할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건지도 궁금하구요.

하나는 대성리역에 설립된 사무실인데요. 경협 사무소에 정부 기관만 파견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협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 민간 경협 단체가 경협 사무소에 같이 입주할 해서 명실공히 대북 경협의 창구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두 사람이라도, 아니면 민간 경협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시끄러웠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경협의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남북 협력의 성격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본격적인 남북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개발펀드 같은 것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런던의 펀드 회사인 앵글로-시노 캐피탈 (Anglo-Sino Capital) 런던 펀드 사가 북한의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조선개발 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펀드 회사도 북한의 천연자원을 담보로 펀드를 조성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에서 진행을 하되 북한개발펀드는 금융 기관들이 맡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들 돈 빌리는데 귀재들 아십니까? 그 분들한테 맡겨서 북한개발펀드를 형성해서 외국의 기관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협력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전문 기관이 북한개발펀드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대북 협력사업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북 협력사업의 규모는 이제 정부에서 다양화되고 규모가 감당하기에 힘들 정도로 커졌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 커지면서 재원 확보 평균 경수로 빼고 3,600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수로로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올해 7,000억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내년에는 더 커질 것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신규 수요에 대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기금의 성격이 바닥이 납니다. 기금이 다 없어지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단년도 예산 개념이 되는 거죠. 또한 그 동안은 3대 협력사업만 있었는데 올해 펼쳐진 것이 농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송전 등 분야도 넓어지고 액수도 커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참여와 민간의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원으로 민간자금, 또 국제 금융기구의 차관이나 양허성 자금,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조성하는 것은 통일부가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그런 점에서 협력공사라는 안이 개발됐습니다. 실제 통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처음에는 연구차원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요즘은 정책에서 집행까지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재, 장비, 설비 같은 것을 구매해서 조달하고 반출하는 업무도 합니다. 북이 지원하는 씨감자나 민간이 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조사, 점검, 영수증 관리 등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200명 가량의 본부 직원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선 남북협력에 관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것을 모체로 해서 2단계로 협력공사를 발족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경협사무소에 민간기업에서 가서 합동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대 아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말씀해주셨는데,

현대 금강산 사업은 그 당시만에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현실화 시킨 것

공감합니다. 우선 조조 관계와 조일 관계, 조조 무역과 조일 무역, 이 두 가지로 비교해 주셨는데요. 우리 경험을 역사적으로 짧지만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대별됩니다. 크게 2003년 8월 이전과 이후로, 또는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대별되는데, 특수거래의 성격이 있고 법적 제도적 장치에 근거한 일반거래의 성격이 있습니다. 현대 아산과 금강산 사업은 특수거래 형태에 속합니다. 2003년 8월에 발효된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조정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재 등 이런 합의서와 기타 아홉 개의 추가 합의서가 남북간에 협정이 됐는데, 금강산 사업만 해도 故 정주영 회장께서 소 천 마리를 몰았던 그 감동적인 이벤트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서로 인간적 신의와 결단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있었던 아태위원회 담화문의 핵심도 인간적 신의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금강산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한 조조 무역의 영역과 흡사한 초기단계 개척기에 있어서 그런 정주영 회장의 통 큰 결단, 창조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선구적 사업으로써 현대 금강산 사업은 사실 10년 전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대북사업의 역할과 공헌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모두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독점권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현대가 초창기에 아무런 제도적 장치와 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를 밀어온, 민간이 정부를 도와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대 아산이 북측과 맺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합의, 독점계약이죠. 그것은 유효한 합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제한하고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사업승인을 요청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런데 교류협력 시행령 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업과 과당 경쟁이 되거나 분쟁의 요소를 일으키면 배제하도록, 즉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 내용 속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번 일이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문제가 터져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일반 거래형식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6·15 정부 대표단의 방북은 남북 최고 수뇌부에 의해 이루어낸 6·15의 평화 정신을 계승한다는 원칙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

6·15때 정부 대표단이 북한에 갔던 것에 대해서는 과분하게 칭찬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당시에 신문 사설들은 일제히 가지 말라고 썼습니다. 특히 6·15니까 615명이 가야하는데 절반만 오라고 통보를 했고 정부는 숫자와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간대표단은 그동안 준비를 쪽 해와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언론들이 정부는 자존심도 없느냐고 비판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가 사고와 판단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 동안은 민간과 정부를 구분했습니다. 뿌리를 보면 해방 공간에서의 정당사회단체의 연속회의, 통일전선전술과 같은 데서 겁먹은 측면이 있고 북측에 맡려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과거 우리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북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방어심리, 그런 심리 기제가 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6·15는 기본적으로 남북의 최고 수뇌부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평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로서 당연히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이 옳다고 원칙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과분하신 평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김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9·19 공동성명의 최소공배수형태, 맞습니다. 이것은 다음주 11월 9일쯤 열리게 되는데 가장 중

북한 수뇌부도 중요한 것은 9·19 공동성명이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하고 이걸 기본국과 같이 사회주의로 해서 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를 비핵화 해야겠다는 6개국의 의적 시장경제 체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주일 뒤에 있을 APEC 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회의를 통해서 또 6자 회담에 갔던 대표단들의 최고 수뇌부 검토와 전개가 있을 것입니다. 6개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21개 국가 정상들과 모여서 다시 이 부분을 재확인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좀더 공고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으로서는 이번에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20년 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7%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인민의 생활 수준과 복리 향상, 그리고 민주화 등등 성과를 나열하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이 이룩한 성취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었죠. 한 예로 2001년에 중국에 가서 천지가 개벽했다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도 앞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전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주체 100년이 되어서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부쩍 공장, 기업, 경제 현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사회적 문화,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다 많은 접촉이 필요하고 또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협력은 남북경협추진위원회라는 틀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체계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틀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체계화·다양화시켜 나가는 것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새터민(탈북자) 관리를 통일부가 아닌 복지부나 다른 부서에서 맡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남북자 문제, 남북자 가족 지원에 관한

현재 통일부 소관
인 새터민 관리 업
무를 타 부처로 이
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임

법률에 대한 소관 부처를 두고 국회에서 법을 냈기 때문에 그 법의 소관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인권위원회가 남북자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리하기로는 국군 포로든 납북자든 존재하는 영역이 이북에 있으면 통일부가 담당을 합니다. 국군 포로가 귀환하면 국군포로 지원은 국방부가 합니다. 그리고 납북자가 귀환하면 그때부터는 행자부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는 새터민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최소 3개월 기간동안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통일부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치인과 학자 중 어느편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부처는 모르지만, 제가 정치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일부는 정치인이 장관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정치인은 늘 유권자 표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국민의 눈높이 속에서 국민의 기준으로 남북 관계를 보고 정책을 들여다보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당 복귀를 기정 사실화 해주셨는데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APEC 회담과 베이징 5차 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인가?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우선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이름값하는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요. 이번 APEC이 보통 APEC이 아니고 설명하신 대로 상당히 분위기가 축적이 된 상태에서 마침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강 국가 원수들이 다 와서 하기 때문에 보통 APEC 정상회담처럼 성명하나 내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이것이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해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평화현장이나, 이런 것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수준의 비금가는 어떤 선언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베이징 5차 회담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잘 알 듯이 여러 가지 베이징 공동성명이 나온 이후부터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던 말이에요. 여기서 특히 북미, 한미간의 말이 있었고,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까지 다녀왔습니다만, 베이징 5차 회담 개막을 위한 물밑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동안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이견과 대립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5차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베이징 회담에 앞서 지금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음

(정동영 통일부 장관) 5차, 6차 회담에 관해서 조율이 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미, 한중, 한일, 우리를 축으로 한 협의도 되고, 북미간에 뉴욕채널을 통해 협의도 되고, 최근에는 한성렬 UN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뉴욕의 한국경제연구원에 와서,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주최하는 회의에 와서 입장도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채널의 접촉이었다면 이제는 세미나든지 회의, 이런데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또 최근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5차, 6차 회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6차 회담의 당사국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서로 연관성 있게 짜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미국에 전달했고 지금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느냐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APEC 회담은 북핵 문제가 풀려 나가고 있는 국면에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이번 APEC 회담은 다행스럽게 핵 문제가 풀려 가고 있는 국면 속에서 한반도 부산에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APEC 역내에 교역과 투자, 경제 협력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이고 역내 협력 증진에 관한 관심도 크지만, 그와 못지 않게 21개국 정상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평화, 그 핵심으로 한반도 평화, 이것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틀로서의 APEC의 역할을 국민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저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제도화되어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려면 결국 남북한 당국자간 그리고 북한 당국과 우리나라 민간기업간의 합의 사항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6·15 공동 선언에서 아직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최고 통치자의 생각이나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님이 보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어떤 조건이 성숙되거나 마련되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가 국회에서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음

(장명봉 국민대학교 교수) 현 참여정부가 해야될 과제로써 남북 관계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규범적 관계로 발전되어야만 남북 관계 발전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가 왜

국회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1991년 12월에 노동당 차원에서 기본합의서에 승인을 했고 최고인민회 상설회의와 정무원, 합동회의에서 승인을 했고, 다음에 국가 주석 김일성이 비준을 했거든요. 법적인 효력 발생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당시 그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시다만, 그 기본 성격에 대해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시다. 당시 기억으로는 법무부의 견해도 그렇고 통일부 견해도 신사협정 정도로, 정치적 선언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근래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늦었지만 그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합의 범주에 들어가 있고 국가 안보에 관련되어 있고 또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입법에 관련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앞으로 비준동의 절차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남북 기본합의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모든 논리를 담고
있음

(이장희 외국어대학교 교수) 지금 평화통일을 위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화해협력단계, 평화구축 심화단계, 남북연합단계, 마지막으로 1민족 1국가 단계를 거쳐나가야 하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화해협력단계는 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 평화구축 심화단계는 정전협정, 남북

연합은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헌장 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의원 헌법 제정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평화의 논리를 우리가 잘 정치해서 국민들도 설득시키고 북한도 설득시키고 국제사회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정신적인 의식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모든 논리가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2년 당시에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해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장명봉, 이장희 교수님께서 공통으로 기본합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곰곰이 뜯어보면 1991년 12월, 1992년 1월에 발효된 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가 없었는지 의문이 있고 시대정신이 투철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1992년 4월에 총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 정당이 선거에 정신이 팔려서 민족문제에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당시에는 남북이 본격적으로 화해협력을 인정하는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남북간의 합의서도 조약에 준해서 국회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이 옹색합니다. 요즘도 그런상황이니 1991년 당시에 최초로 남북간에 만나서 엄청난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소속위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한나라당에 당론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정부에서 동의 안을 바로 만들어 오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요소가 아니고 사회적, 정치적 합의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용호 교수님께서 남북 당국간, 기업간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남북 제2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함

또 하나의 반침으로써 정상회담을 질문하셨습니다. 기자 분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년 6월 15일 성명에서 북이 한 정상회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정부로써도 노력하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더 듣고 싶은 답변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추가 취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분 정도 더 모일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주한 대사중 한 분을 모실까? 아니면 개성공단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이사장을 모실까? 저희들이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선, 무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아침시간을 내 주신 장관님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sjhong@hri.co.kr) ☎ 02-3669-4182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leesw@hri.co.kr) ☎ 02-3669-4014
